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북한 경제운용의 변화

박 희 진*

- I. 서론
- II. 중국 동북지역개발과 북·중경협
- III. 북한 경제운용의 변화
- IV. 결론

요약

2009년 이후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개발정책을 연이어 수립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과 약 1,400km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북한 경제 운용에 영향과 파장을 크게 불러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동북지역개발정책은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쌍궤를 이루며, 서부지역의 요녕벨트와 동부지역의 나진선봉특구라는 북·중경제협력의 통로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에 북한은 북·중경협 배경으로 대외개방적 경제협력경제특구정책과 내부의 자립적 산업정책이라는 이원적 경제운용 방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날 경제파탄 위기 앞에 시장도입을 통해 계획체제를 복원하고자 했다면, 현재 북한은 <대외경제, 시장경제, 비계획경제> 운용을 통해 내부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변화한 시대에 걸맞게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의 폭을 확대했고, 최첨단산업발전이라는 질적 구성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핵심 문제는 정책실현의 현실화, 성공가능성 문제이다. 현재 주목할 만한 상황은 2012년 미·중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전략적 조정기에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주변상황이 갈등과 분쟁에서 대화와 협력적 조정기에 들어선 2-3년의 시간, 이 시간이 북한에게는 기회이다. 게다가 중국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북한 계획의 현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망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이 2000년대 초반 시장을 통한 경제숨트이기를 했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주변국을 움직이며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은 향후 북한경제가 회생을 넘어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지 주목하게 한다. 또한 당분간 북·중경협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가 역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응이 요구된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2009년 이후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개발정책을 연이어 수립함으로써, 중국 동북지역과 약 1,400km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북한 경제 운용에 영향과 파장을 크게 불러 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던 북한도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2011년 6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착공식을 가졌고, 지난 9월에는 러시아 가스관연결 사업구상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박람회 개최하였다.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1.15)’을 수립한 이후 계획실현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동북지역개발 정책은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쌍궤를 이루며, 서부지역의 요녕벨트와 동부지역의 나진선봉특구라는 북·중경제협력의 통로와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나아가 확장되고 있는 북·중경제협력을 배경으로 북한 당국은 자체의 경제운용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대외개방적 경제협력·경제특구정책과 내부의 자립적 산업정책이라는 이원적 경제운용 방식이 그것이다. 지난날 경제과탄 위기 앞에 시장도입을 통해 계획체계를 복원하고자 했다면, 현재 북한은 <대외경제, 시장경제, 비계획경제> 운용을 통해 내부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의 동북지역개발 현황 속에서 북·중경제협력에 따른 미치는 북한의 경제운용방식 변화를 추적하고, 북한의 경제개발정책(2010~2020년)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중국 동북지역개발과 북·중경제협

세계적 강대국(global power)의 반열에 오른 오늘날 중국의 외교 목표는 ‘종합 국력 증강을 기반으로 적극 외교를 통해 중국위협론에 대응하고,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¹⁾ 중국의 부상이 결코 국제사회에 불안과

1) 泰亚青·周建明·温铁军·时段弘·张文木, “中国大战略: 问题马思路,” 『学术界』 第二其 (2006).

위협이 되지 않으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제공하는 책임국가(책임대국론, 평화굴기론)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 중국의 책임대국 출발은 동아시아 지역이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경제발전, 체제유지, 대만과의 통일, 변경지역의 안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 안정적 외교 안보관계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주변 안보환경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지역협력을 도모하면서 역내 안보딜레마 해소와 영향력 증대라는 외교 목표를 구사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 한반도 지역은 ‘중국의 부상을 위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가 필요한 지역이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한 대국으로의 입지 강화’의 전략적 지역이다. 때문에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한반도 환경 속에서 중국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기점으로 대북한 정책 조정을 단행하게 된다. 그리고 전환된 대북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이후 3차례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첫째, 전략적 소통의 강화이다.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처한 북한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체제관리 의지이다. 둘째, 경제협력과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의 유도를 통한 친중국체제의 연착륙이다.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의 연장선이다. 셋째, 북핵 6자회담의 재개이다.

간결하지만 명확한 중국의 대북한 메시지는 중국 부상의 걸림돌인 안보문제를 관리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한반도 전략의 일환이자 당면한 대북한 정책목표이다.²⁾ 그리고 현재 중국의 전략이 동북지역개발과 북·중경제협력으로 구체화 되어 실행 중이다.

1. 중국의 동북지역개발 구상과 현황

중국의 동북진흥계획³⁾에 의하면 요녕성은 요녕연해경제대발전규획(遼寧沿海經濟帶

2) 이동률, “변화하는 중국과 북·중관계: 최근 정상회담 개최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중국: 비전과 과제』, (사)코리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11.8), 50~51쪽.

3) 동북진흥계획은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 제출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2003년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11호 문건, 2003. 10.5)을 제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7년 8월 20일 국가차원에서 ‘동북지구진흥계획’을 공식발표하였다. 또한 중국 국무원이 동북진흥의 일환으로 2009년 7월1일 ‘요녕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을 국가전략으로 정식 비준하였으며, 2009년 8월30일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위한

發展規劃), 길림성은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계획(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的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 흑룡강성은 하대치공업회랑지대(哈大齊工業發展計劃)를 중심으로 각 성의 발전계획이 국가발전전략과 지역협력전략으로 중층화되어 있다. 동북진흥계획은 러시아 극동부터 내몽고 동부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통물류 연계 및 대외국경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동북 3성의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국가 간 국경지역 외에도 러시아, 북한, 몽골지역 내부의 자원개발협력을 도모하고 있고,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에는 변경무역, 경제합작구, 수출가공구, 수출입자원가공구를 건설할 수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로써 중국의 동북지역은 기존의 지역범위에서 벗어나 몽골, 러시아, 북한과의 국가간, 지방간, 기업간 종합적 협력발전이 가능해졌고, 동북아지역 내 초국경적 협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중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전개되는 부분은 요녕연해경제대발전규획(이하 요녕벨트)과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계획(이하 창지투개발계획)이다.⁴⁾

요녕벨트는 동북연해지역을 동남연해지역과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켜 신(新)경제성장축을 형성하는 계획이다. 이 구상은 단둥시를 중심으로 발전권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舊)단둥-신(新)단둥-단둥항으로 이어지는 연해산업단지 개발이 핵심 내용이다. 요녕벨트 계획은 구(舊)단둥-신(新)단둥-단둥항으로 이어지는 산업단지 개발과 인접한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발계획과 연계되며, 북·중간 중요 교역통로라 할 수 있는 단둥-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포함한다. 또 단둥-신의주-평양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미래지향적 구상이 엮보이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단둥권역 개발사업은 심양-단둥 고속철도, 동변도철도, 단둥-대련 고속도로, 통화-단둥 고속도로 등 주요 도시간 도로철도 인프라 건설이 시작되어 단둥지역의 투자기반 여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때문에 단둥-황금평-신의주를 중심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창지투개발계획은 장춘-길림-두만강 유역을 성장축으로 동해로의 출로를 확보하고, 몽골에서부터 중국 내륙을 거쳐 동해로 이어지는 대통로(大通路)개발이 핵심적 내용

두만강구역합작개발계획요강’을 정식 비준하였다. 흑룡강성의 경우 2009년 4월 하대치(하얼빈-다칭-치치하얼)공업지대 건설구, 동부 석탄전기화기지 건설구 등 ‘8대 경제구’ 건설계획이 정식비준을 받으면서 지역발전 로드맵을 구체화하였다.

4) 관련한 문헌은 다수이나, 가장 구체현황을 제출하고 있는 문헌은 다음을 참조. 윤승현, “최근 중국의 대북 경험 실태와 전망,” 『북-중 경제협력 강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정책포럼 제18차 국제세미나 자료집(2011.4), 44~53쪽.

이다. 위상학적으로 대통로 동해 출로에 위치하는 북한의 나선특구개발은 북·중경협 의 요체이다. 창지투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중국은 첫째, 훈춘과 도문에 동북아 경제 무역단지를 조성하며, 둘째, 훈춘과 나진간 교량·도로를 건설하고, 셋째, 나진항 1호 부두 개발과, 넷째, 권하-원정 다리를 개보수하고(이미 완료), 다섯째, 도문-남양-청진 철도 및 청진항 개보수를 추진함으로써 북한 동북부 항만 배후단지 조성과 동시에 중국 기업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밖에 동서 양측의 계획을 연결하는 동변도철도 건설은 북한, 러시아 국경선을 따라 건설되고 있다. 총 길이가 1,380km이며, 흑룡강성 수분하, 목단강, 길림성 도문, 연길, 통화, 요녕성 환인, 단둥, 황허, 대련 등을 연결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인접 국경도시 10여 곳을 경유하며, 북한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역은 단둥-신의주역, 집안-만포역, 도문-남영역이다.⁵⁾ 이들 지역은 예전부터 북·중간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접경지역으로 동변도 철도가 개통된다면 양국의 인적·물적교류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북·중 경제교류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동변도철도는 또한 중국의 동북3성 주요 산업단지들과 북한 내륙의 주요 산업 단지들을 연계하는 효과로 인하여 중국 동북부와 북한 북부의 일체화된 경제권역 형성을 가능케 한다.

이처럼 중국의 요녕벨트와 두만강지역개발, 그리고 동변도철도 건설계획은 북한이 중국의 개발개방구상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중국의 동북진흥을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중심의 지역협력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중국과 북한이 상호간 이 지역의 발전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과 계산은 동상이몽(同床異夢)할 수 있지만⁶⁾, 북·중 양국은 전략적 일치점을 찾아 협력을 가속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2. 북한의 경제특구와 북·중경제협력

중국이 북·중경협을 통해 동북아에서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를 확보

5) 북·중 접경지역 도로·철도와 관련해서 다음 문헌을 참조. 이옥희, 『북·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 지역의 도시네트워크』, (서울: 푸른길, 2011), 136~139쪽.

6) 동북아지역의 협력구도 형성의 제약조건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谭红梅, “东北亚区域合作前景马中国东北的政策选择,” 『동북아연구』, 제25권 제2호(2010), 143~144쪽.

하고자 한다면, 북한은 북한 나름의 추진 구상이 존재한다. 당면하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물자공급을 받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해 국내생산을 정상화시키고, 후계체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생산재 공급을 확보하고, 국내 소비품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갖고 있는 지경학적 위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국제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주변의 인접 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해 왔다. 현재 북한은 중국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때문에 북한의 북·중경협 의도와 구상은 중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개발현황과 연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나선경제무역지대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대외개방 구상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자체의 제한성 이외에도 주변국들과의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상호 맞물려 있다. 1991년 두만강유역개발사업 구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정체되어 온 것처럼,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 무산, 2008년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등이 그 반증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북·중경협의 주요 동력은 중국에게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 전환과 동북지역개발을 위해 북한의 동해출로 확보가 유인책이 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섬으로써 양국의 경제협력은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게 된다. 북한은 ‘인식을 전환하고 방향을 돌려세우며 긴요한 필요성’에 의해 다가오는 중국의 협력구상을 자신들의 경제회생 동력으로 삼고자 더욱 가속을 붙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훈춘과 도문’을 중심으로 중국내 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시키고, 동해출로로 연결되는 도로, 철도기반 시설 및 항만 시설 설비투자에 주력하고자 한다면, 북한은 중국과의 연결 통로를 통해 최대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며 나선경제특구의 최첨단 산업기지화를 구상하고 있다. 동해출로를 제공하는 한 중국으로부터의 최대한의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선경제특구를 놓고 북·중간의 실리 최대화 전략이 물밑에서 전개 중인 것이다.

중국은 나선경제특구의 시설투자를 통해 동해출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측 입장을 반영하는 훈춘-나선 간 도로(53km) 확장보수, 나선항

중국 화물 해외운송기지 건설, 고효율 현대화 농업단지 건설, 장춘 야타이(亞泰)사의 시멘트 공장건설, 중국인 자가용 관광 실시 등 5개 사업은 이미 착공식을 갖는 등 가시적인 진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곧 훈춘 다탕(大唐)발전소의 전력을 나선으로 송전하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나선시에 이치자동차 트럭부품 조립생산 공장을 설립해 무산철광에 공급하고 자동차 판매전시장을 설립하는 등 장기적으로 상용차와 승용차를 생산할 계획이다.⁷⁾

중국측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 중앙은 창지투개발계획에 의해 나진항 및 나선지대 개발은 이미 큰 골격이 잡혔고, 세부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선경제특구로부터 시작해서 향후 두만강의 모든 통상구 및 청진항 개발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환태평양 공동체 구상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전했다.⁸⁾

그러나 북한 역시 아래의 <표 1>, <표 2>, <표 3>에서 보듯 2010-2032년 나선경제 특구개발에 관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전략적 구상의 핵심은 중국을 활용하여 기초건설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뿐 아니라, 전면적 종합개발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북아메리카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중계거점특구, 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점이다. 특히 나선경제특구는 중국에 있어 솜통의 역할을 하는 전략적 지점으로, 이를 통해 경제적 실리를 최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을 최우선의 협력대상으로 기초건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태국의 록슬리 태평양주식회사를 통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온라인 네트워크형성, 러시아를 통한 하산-라진항 철도 개건 현대화 합의 및 3호 부두 설계공정 완성 등 해외투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⁹⁾ 중국을 활용하되, 중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무역선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통해 출로를 틀어쥐으로써 지경학적 이점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며 주도성을 잃지 않으려는 구상이다.

7) 임을출, “북·중 경제협력의 의미,” 『프레시안』, 2011.7.4

8) 길림대학의 동북아연구원분들과 인터뷰. 2011.7.6

9) 필자가 만난 일본거주 대북전문가에 의하면, 중국 중앙정부는 제3국의 자본이 신의주, 나선에 참여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나진 2호 부두를 스위스가 하는 것을 재미없어 하며, 같은 논리로 원산 캠프스키 관광개발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2011.7월 면담) 그럼에도 현재 나선지구는 55개 외국무역기업과 14개 해외사무소를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罗先投资者服务中心,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罗先经济贸易区简介,” (2011.8.30)

<표 1> 나선경제무역지대 항구개발 구상

| | 현실태(현재~2년간) 개발총계획완성단계 | 개발계획 | |
|-----|--|---|--|
| | | 당면단계(5년간) | 전망단계(15년간) |
| 라진항 | 총부지면적 : 37.5정보 년간 300만t 화물 통과능력 3개 돌출 부두의 10개 안벽 1만t급 짐배 9척, 7천t급 짐배 4척 동시취급 | 화물통과량 940만t 부두1개 신설, 총11개 안벽에서 화물취급 1·2호부두: 잡화집 220만t 3·4호부두: 짐함전용 부두길이 : 3,229m | 화물통과량 4500만t 5·6·7호 짐함 부두건설 36개 안벽에서 화물취급 부두길이 : 7,904m |
| 선봉항 | 총부지면적 : 19정보 년간 300만t 처리능력 원유 및 산적 짐함 5천t급 선박 1척, 1만t급 선박 2척 동시취급 20~30만t급 유조선은 해저송유관을 통해 원유 압송 | 화물통과량 : 500만t 송유관, 3호 안벽 개건보수 년간 200만t 산적짐과 원유 입출하 기타 화물 500만t 처리 | 화물통과량 800만t 2호부두 2~5만t급 짐배계선부두로 개건확장 |
| 웅상항 | 총부지면적 : 22정보 항통과능력 : 50만t 2만m ² 의 석탄야적장과 15만m ² 의 통나무부두(하륙장) | 화물통과량 : 100만t 1만t급 선박취급계획 화물수송조건 완비 | 화물통과량 : 500만t 부두확장 새 방파제 건설 |

자료: 라선투자봉사센터, 라선경제무역지대 박람회 발표자료 (2011.9)

<표 2> 나선경제무역지대 교통운수체계 구상

| | 현실태(현재~2년간) 개발총계획완성단계 | 개발계획 | |
|-----|---|---|--|
| | | 당면단계(5년간) | 전망단계(15년간) |
| 철도 | 라진-남양철도(표준궤) 년간 50만t 통과능력 라진-두만강철도(혼합선) 년간 50만t 통과능력 | 철도의 현대화, 중량화 지휘체계의 정보화 실현 라진-두만강(약 50km) 흥의-남양(약 110km)의 통과능력, 900만t 장성 | 라진-두만강 선봉-원정 철도 신설 화물통과능력 년4천만t |
| 비행장 | 안주직승기 착륙장 직승기 4대 동시 이착륙 | 직승기 착륙장 개건현대화 비행장 건설 완공 (함북 청진 청암구역 삼해리 가진반도) | 활주로 2개 건설, 확장 |
| 도로 | 라진-훈춘 도로 통과능력 150만t 라진항 통과화물 수송진행 | 라진항-원정 도로능력확장 년간 150만대 차량 750만t 화물통과능력조성 | 라진-원정 고속도로 청학-두만강 고속건설 라진-선봉-웅상-두만강 고속도로(약 40km) 관광도록(약 50km) 도시내부망(약 460km) |

자료: 라선투자봉사센터, 라선경제무역지대 박람회 발표자료 (2011.9)

<표 3> 나선경제무역지대 첨단산업단지 구상

| 수출가공기지로서의 성격과 사명에 맞게 최첨단기술과 현대적 설비로 장비된 공업구 - 창설, 점-선형 도시구조에 부합되는 합리적 공업구조 확립 | |
|--|--|
| 라진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가공수출을 기본으로 할 유현보세수출가공구 - 선박건조와 배수리전문의 창평조선업 및 배수리공업구 - 최첨단정보기술을 위주로 할 청계전자자동화공업구 - 현대화된 경공업공장들로 꾸러지게 될 신흥경공업구 - 첨단기술산업체들로 이루어질 동명첨단기술구 |
| 선봉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리화학연합기업소와 원유화학관련기업들로 꾸러질 3,000여정보의 지역적 석유화학공업 중심인 관곡화학공업구 - 첨단기술연구개발산업체들이 배치될 백학첨단기술구 - 경공업공장들을 위주로 할 중현경공업구 |
| 웅상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웅상 목재가공 공업구: 목재전문처리항인 웅상항의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목재가공관련기업들을 배치할 것으로 계획 |

자료: 라선투자봉사센터, 라선경제무역지대 박람회 발표자료 (2011.9)¹⁰⁾

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나선경제특구와 달리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에 관한 북·중 양국의 의도와 구상에 대한 해석은 다소 분분하다.¹¹⁾ 그러나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특구의 무산에서 보아 지듯, 중국은 압록강 서북부 북한의 경제특구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북한의 북부산업기반과 중국의 동북부 산업기반이 대체로 유사하여, 자본과 기술 투자가 북·중 양국으로 분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까닭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한 동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시설부터 유통-판매시설까지 동북지방의 경제지대를 활성화 하는 것이 실익인 까닭이다. 요녕성과 단둥시가 2008년 세운 신도시개발계획과 경제

10) 2011.9.7일 장춘회의전시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동북아박람회 <조선의 날> 및 조중무역투자대상 상담회에서 라진시인민위원회 경제협력국 산하 라진투자봉사센터에서 <황금의 삼각주>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소개하는 14개 PPT(도판)을 발표하였다. 이를 3측면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11)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에 관하여서는 중국의 요녕벨트 구상을 중심에 둘 것인지, 북한의 신의주 연계 개발을 중심에 둘 것인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중국의 요녕벨트 구상을 중심에 두면 북한의 적극적 외교공세와 나선특구에 대한 또 다른 보상조치로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승인한 것이 된다. 북한의 신의주 연계개발을 중심에 두면 중국의 적극적 개방공세로 인해 북한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를 승인한 것으로 향후 중국은 신의주 연계개발은 물론 평양까지 개방화의 흐름을 주입하는 구상이 된다. 북·중 양국의 힘겨루기 싸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다. 남문화, “북한과 중국의 ‘신의주 빅딜’ 막전막후,” 「시사IN」, 2011.5.30; 남문화, “경제 동북공정’ 이미 시작됐다,” 「시사IN」, 2011.10.4.

개발구 계획에는 황금평이 들어있지 않았으나 2009년 중앙정부의 지시로 황금평·위화도 개발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중국 입장에서 요녕벨트는 동북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지지대로서 앞으로 상해 및 광주에 비견되는 제2의 개발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요녕벨트의 핵심은 신단둥 건설과 단둥항으로 이어지는 임해산업단지 조성이다. 신단둥에서 동항까지 98평방미터에 이르는 신개발지역은 100만 인구규모의 구단둥 옆에 200만 인구규모의 신단둥을 건설하고, 신단둥에서 단둥항까지 이어지는 압록강 연안에 최첨단 산업단지 및 조선소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또 구동항을 신동항으로 개건·확장하여 대련보다 큰 항구로서 명실상부한 요녕성의 주요 항만건설을 계획하고 있다.¹²⁾

중국의 요녕벨트 계획 내용이 위와 같기 때문에 인접한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는 요녕벨트의 건설속도와 직결되어 있다. 중국측 입장에서 중북분산 투자를 막기 위해 단둥 산업단지투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 활동 조건이 양호한 중국의 단둥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나선 경제특구와 달리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건설의 속도는 더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다만 요녕벨트 건설이 성과를 거두고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와의 순조로운 연계가 형성된다면 반드시 신의주와 연계개발로 확장될 것이다. 1단계로 황금평을 개발하고, 2단계로 위화도, 3단계로 비단섬과 신의주를 개발하는 계획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신단둥에서 신동항으로 이어지는 임해산업단지 건설이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는 나선경제특구와 다른 사업정형을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표 4>에서 보듯,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발은 북·중 공동 시장 중심의 ‘상업센터건설’이 핵심 사업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항구 및 도로 건설이 신단둥과 연결되고, 신단둥의 임해산업단지와 연결하여 황금평의 정보산업, 피복가공업이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국의 요녕벨트 구상의 실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발은 당면하여 북·중경협의 상업적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황금평과 신의주-평양으로 이어지는 상업 소비품의 유통경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 재미국적 중국투자 한국인 인터뷰, 2011.7.

<표 4> 북한 황금평경제지대 산업배치와 발전중심

| | |
|----------------|--|
| 산업센터 건 설 | 중조 공동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해당 봉사 및 오락시설 건설 물건사기, 휴식, 사무, 전람, 금융봉사 등 하나로 일치화된 첨단산업센터로 발전 |
| 정보산업 | 황금평 경제지대와 중국 단둥시의 정보산업을 조화발전 조선측이 프로그램작성 비교우세를 발휘 소프트웨어 주문봉사 기초의 정보산업 건설 |
| 관광문화 산 업 | 조선민족문화와 인재자원이용 아리랑 등 주제의 문화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 기념품의 설계, 전람을 중점 발전 장기적으로 민족문화와 관계되는 복장, 완구, 모형, 장식품 등 생산 발전 |
| 현대시설 농 업 | 우량품종 육종, 알곡작물 우량품종 생산기지 건설 분수식관개, 방울식관개 등 고효율 물절약 농업시범단지 건설 태양에너지온실, 남새, 과일, 화초생산기지 건설 현대 농업기술연구교류센터 건설 |
| 피복가공 | 피복기업을 끌어들여 공장건설, 주문생산, 유연성생산 등 령활한 방식 취하며 이름난 피복과 장식제품생산을 중점 발전 장기적으로 자체의 피복상표를 가지며 제품의 부가가치와 외화획득능력 증가 |
| 항 구 | 황금평과 신의주 사이 여객 및 화물운수 수요를 만족시키는 여객 및 화물 부두 건설 중국 단둥 대동항을 이용하여 화물의 수상운수 수요 만족 |
| 도 로 | 황금평경제지대 내 그물형식의 도로망 건설 2개의 출입도로를 건설, 중국 단둥신구와 연결하며 인접의 압록강 새다리통과능력을 이용하여 황금평지대와 조선사이의 수요만족 |
| 기 타 | 중국 단둥비행장을 이용하여 대외항공교통을 실현 단둥에서 직접 해당한 전력선로를 끌어들여 배전망 건설 개발정도에 따라 급수, 가스공급, 열공급능력 증가 오수·오물 처리시설 건설 인터넷망, 고정통신망, 이동통신망을 건설 |

자료: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의,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2011.6)

다. 관광협력 사업

동서 양측의 경제특구 중심으로 북·중경협이 진행되자, 관광협력 사업 또한 활기를 띠고 있다. 나선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놓아진 도로·철도를 따라 북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673호)으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6장41조)’을 채택하고(2011.5.31), 2002년 발표된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시행령의 효력을 소멸하였다. 기존의 남북협력사업을 국제관광특구로

확대·개편하여 중국측 사업자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국제방송(CRI)에 의하면, 북·중 간에 열차관광노선은 이미 개통되었고 중국인 103명이 칠보산 관광을 시작했다. 또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 대상의 금강산 관광이 ‘영 파이오니어 투어(www.youngpioneertour.com)’ 여행사를 통해 오는 10월 실시된다. 이들 관광은 중국 도문에서 나선까지 육로를 이용한 후, 나선항에서 금강산의 장전항까지 크루즈(만경봉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¹³⁾ 나아가 중국, 북한, 러시아의 무비자 관광을 시범 실시(4.26~30)하는 등 나선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한 북·중 접경지역의 관광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관광사업은 외자유치와 기간산업의 투자-생산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외화소득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북한 경제운용의 원활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III 북한 경제운용의 변화

북한의 북·중협력 강화 및 대외개방적 정책시행은 2012년에 맞추어져 있다. 북한에게 2012년의 함의는 대단히 크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70세, 그리고 전력을 쏟아온 ‘강성대국’의 원년이다. 이에 정치, 사상 강성대국으로서의 북한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 및 국내 경제회생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과 전략적 합일점을 찾은 2009년 이후 북한의 경제운용이 변화하게 된다.

1. 대외개방적 경제운영

북한은 2000년 이후 경제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된 생산요소를 집중하여 기간산업과 중점기업에 투입함으로써 북한경제가 단시일 내에 성장효과를 내도록

13) 「통일뉴스」, 2011.10.10.

하였다.¹⁴⁾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기간산업과 중점기업이 북한의 경제를 살려내기에 역부족일 뿐 아니라, 기타 산업 특히 경공업 중심의 인민소비품 생산발전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일례로 김정일 위원장은 2005년에서 2010년까지 기업에 대한 현지도도를 총 326회 실시했고, 현지도도 시찰 대상이 되었던 공장·기업소는 235개 이다 (<표 5> 참조). 이중 기간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총 80곳(34.2%)으로¹⁵⁾, 이들 기업은 대체로 만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으로 현지도도를 통해 생산을 독려한 단위이다. 즉,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전력공업과 금속공업 그리고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지만, 실제 국가의 지원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기간사업과 중점기업들은 경제발전의 견인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표 5> 김정일 위원장 현지도도단위 통계 (2005~2010)

| 지역 | 전력 | 화학 | 기계 | 금속 | 광업 | 농목어 | 경공업 | 식품 | 합계 | 비중 (%) |
|--------|------|-----|------|-----|-----|------|------|------|-----|--------|
| 평북 | 2 | 0 | 11 | 1 | 3 | 13 | 8 | 1 | 39 | 16.6 |
| 평남 | 2 | 1 | 4 | 1 | 1 | 0 | 2 | 0 | 11 | 4.7 |
| 함북 | 3 | 2 | 2 | 2 | 1 | 5 | 6 | 6 | 27 | 11.5 |
| 함남 | 4 | 4 | 2 | 2 | 3 | 10 | 6 | 1 | 32 | 13.6 |
| 자강 | 3 | 0 | 8 | 3 | 1 | 7 | 15 | 5 | 42 | 17.9 |
| 황북 | 1 | 0 | 0 | 1 | 0 | 4 | 0 | 0 | 6 | 2.6 |
| 황남 | 0 | 0 | 0 | 0 | 1 | 3 | 0 | 0 | 4 | 1.7 |
| 강원 | 3 | 1 | 0 | 1 | 0 | 2 | 2 | 1 | 10 | 4.3 |
| 양강 | 2 | 0 | 0 | 1 | 0 | 2 | 1 | 2 | 8 | 3.4 |
| 평양 | 0 | 0 | 1 | 0 | 0 | 5 | 16 | 8 | 30 | 12.8 |
| 군부 | 0 | 0 | 1 | 1 | 1 | 20 | 2 | 2 | 26 | 11.1 |
| 합계 | 20 | 8 | 29 | 13 | 10 | 71 | 58 | 26 | 235 | 100 |
| 비중 (%) | 34.2 | | | | | 30.2 | 24.7 | 11.1 | 100 | |
| | 8.5 | 3.4 | 12.4 | 5.6 | 4.3 | | | | | |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종합

14) 북한은 2000년 이후 '오늘의 조건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자는 식'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빨리 할수 없기 때문에 중앙 계획경제차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중점기업'과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송 부분의 선행 부문 공장·기업소들 순으로 수직적 계획배분체계를 운영해 왔다. 박희진, 『북한과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 경제학』(서울: 선인, 2009), 306~314쪽.

15) 현지도도의 주요지역은 자강도를 비롯하여 함경남북도 및 평안북도에 집중되고 있어 중국과 이웃하는 변경지역과 연계가 밀접하다. 김철, "중북관계의 현황과 향후과제," 『한반도와 중국: 비전과 과제』, (사) 코리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2011.8), 82쪽.

북한은 기간공업이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대규모 외자유치를 통한 기간산업의 부흥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북한은 속도감 있는 경제성장과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인민소비품 공급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대외경제활동을 벌일 데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다.

구체 전략방침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1.15)’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가경제개발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하 대풍그룹)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0억 달러를 투자 유치해 개발한다.¹⁶⁾ 국가경제개발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은 크게 4개 부문이다. 청진·나선지구 개발(360~400억\$), 남포IT산업기술단지 개발(100~120억\$), 김책광업제련단지 개발(80억\$), 그리고 철도·도로건설(250억\$)이다. 이 밖에 농업개발(15억\$), 전력개발(40억\$), 평양국제공항 신축(12억\$)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전역을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방면과 ‘라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는 동북방면의 양대 축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완성한다. 또한 박철수 대풍그룹 총재는 재중 동포로서, 대풍그룹이 주도하는 국가경제개발전략은 국가예산에서 완전히 독립된 프로젝트라 밝힌 바 있다.¹⁷⁾

이것의 유의미성은 첫째, 북한이 경제회생을 넘어서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제기하듯이 이의 실현은 국가계획 밖의 독립된 기획단위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향후 외자유치가 관건적 문제라는 점이다. 셋째, 외자유치에 성공하게 될 경우 북한 경제는 광범위한 합자기업, 합영기업을 탄생시키게 되면서 북한의 실질적 개방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는 내각 직속의 합영합작, 외국투자를 총괄하는 중앙지도기관으로 2010년 7월 8일 신설된 합영투자위원회(리철 前스위스 대사, 79)가 있다.¹⁸⁾ 합영투자위 산하에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전문적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써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있다. 합영투자위가 다른 나라 정부기관들을 카운터

16) 대풍그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통일뉴스」, 2011.10.6.

17) 「조선신보」, 2011.3.10.

18)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투자정책집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합영투자위는 무역성과 동급기관이며, 무역성이 나라의 무역전반을 보는 중앙지도기관이라면, 합영투자위는 투자유치와 합영합작을 실현하는 사업을 돌본다.” 「조선신보」, 2011.6.22.

파트너로 한다면, 민간기업은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에 지난해 말 북경에서 중국 상무부와 황금평 및 나선경제특구 합작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주체가 합영투자위원회이다.¹⁹⁾ 실질적인 대외경제협력 및 북·중경제협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주체인 것이다.

종합하면 북한은 대풍그룹이 주도하는 국가경제개발전략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내각의 합영투자위가 동서 양측의 북·중경제협력을 진행하면서 대외개방적 경제운용을 시도하고 있다. 공간적 개념을 도입해 위상학적으로 보면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내려간 이후 원산, 함흥, 청진, 나선으로 이어지는 U자 곡선으로 국가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황금평-신의주 그리고 나선경제특구는 내각이 책임지고 중국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동서 양측이 북한 내륙의 주요 기간산업 건설과 연결되는 부문은 대풍그룹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또한 U자 곡선의 중앙부문, 평북일부-자강도 중심의 강계, 희천 등 내륙의 군수공업부문은 국가 주도 아래 개방의 효과를 차단함과 동시에 계획적 운용을 병행하는 그림이다.

2. 대내자립적 경제운용

국가 기간산업 및 주요 거점도시 육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북한은 2010년 ~2011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경공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전환한다.²⁰⁾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이 경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구사할 때는 속도와 균형의 조절을 필요로 하는 시기, 즉, 완충기였다. 한정된 자원을 수직적으로 배분하여 인민생활이 매우 힘들어지자 북한 당국은 대내 경제운용을 경공업에 집중함으로써 주민들이 강성대국 건설을 실감하고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 경공업은 상대적으로 소요 재원이 소규모이며 생산 순환기간이 짧고 자금 회전속도가 빠르다는 경제적 측면을

19) 상호 대칭적으로 중국 측에서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국무원 산하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요녕성, 길림성 정부 - 북한 측에서는 외무성, 합영투자위, 라선시 인민위원회, 평안북도 도인민위원회가 공동개발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강성대국 건설의 성패는 경공업 전선에 달려 있다(2011.1.12 노동신문)”, “경공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2011.1.15 노동신문)”, “경공업부문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을 일으켜야 한다(2011.2.8 민주조선)”, “경공업부문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 관심을 제고(2011.2.24 조선중앙방송)” 등.

고려할 때도 지금 필요한 정책 수정이다.

경공업을 강조하는 대내경제 운용방침은 국가의 지방공업 지원강화를 한 축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지방공업 공장의 만부하 가동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¹⁾ 경제 위기 이전시기 북한은 군(郡)을 기초단위로 한 지방공장들이 농산물과 식료가공 및 일용품 등 전체 경공업제품의 53% 정도를 생산하는 절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 대외무역 수출품의 대부분은 지방공장들의 현지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들이어서 지방공장의 정상가동은 외화획득에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지방공업의 활성화가 곧 침체상태의 산업 활동의 돌파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공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점인 시, 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공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2009년 이후 북한은 경공업제품의 생산에 원료, 자재를 공급하는 화학공업에 대한 현지지도를 증가시켰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7월7일련합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그리고 평양의 보통강신발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양말공장 등에게 그 원료가 공급되고 있다.²²⁾ 2011년 상반기 계획수행평가에 의하면 자강도, 회령시, 이원군, 맹산군 등 각지 지방공업 공장·기업소 중심의 방직, 편직, 비단공업부문에서도 상반기 계획을 넘쳐 수행했다.²³⁾ 북한이 최근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우리 식의 CNC’ 등을 강조하는 이유 또한 자력갱생 기술을 강조하며, 경공업 공장의 만부하 가동을 위한 정책운용의 일환이다.

당국의 노력과 달리 지방단위의 경공업은 주민들의 노력동원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경공업제품 생산체계는 대규모의 중앙공업, 중·소규모의 지방공업, 그리고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자재, 폐자재를 활용하여 소위 ‘8·3인민소비품’을 만들어내는 공장·기업소의 생필품직장, 작업반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보듯 중앙단위 경공업공장은 주로 국가 지원 아래 기업가동을 정상화 하는 반면 내수용 생필품을 담당하고 있는 규모가 영세한 지방경공업공장들은 8·3인민소비품에 의존

21) 지방공업은 중앙공업과 대비되는 범주로, “지방의 원자재와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공업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기업소로서 지방경제 조직이 관장하는 부문”으로 정의한다. 『로동신문』, 2011.3.10.

22) 경공업공장에 대한 주요 현지지도는 다음과 같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2009.2.5; 11.7; 2010.2.8; 2.10; 8.3),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2009.5.29; 2010.6.6; 2011.5.8), 7월7일련합기업소(2009.2.23), 홍남비료연합기업소(2009.2.7; 11.7; 2010.8.4; 2011.3.10). 배종렬, “북한의 딜레마: 경제강국 건설과 시장경제,” 『수은북한경제』, 2011년 여름호, 8쪽.

23)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2011.9.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무원, 학생, 가정부인, 가두여성, 년로보장 노인 등 노력을 동원하여 군(郡)지역별로 산과일, 산나물 채취 등을 벌여 식품, 과일 가공생산품을 만들거나, 파지, 파철 수집 동원을 하거나, 직물, 의류, 봉제의 간단한 수작업을 하는 노동형태가 보편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북한의 대내적 경제 운용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통제와 주체와 자립을 강조하는 역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외개방적 경제운용의 성과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처럼 경공업 육성 및 지방공업 지원을 통해 인민 생활소비품 증산을 목표로 경제를 추동 중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소비품 공급을 확대하여 2012년 경제강국 진입 성과의 일환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경제난에 따른 민심이반 현상을 완화시켜 보려는 정책을 진행 중인 것이다.

IV 결 론

2009년 이후 북한의 경제운용은 2012년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대외개방적 경제개발전략과 대내자립적 노력동원정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운용의 패턴과 정향만으로 보면 북한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외개방적 경제발전전략을 보면 핵심사업인 북·중경협은 지난 2002년 남북경협 방식과 동일한 패턴과 정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사업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로 다시 지정되어 중국과의 협력 사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둘째, 이미 2002년 당시 금강산개성 등과 함께 시도되었던 신의주사업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사업’으로 변경하여 개발착수에 돌입하였다. 셋째,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과 연계한 라선경제특구 사업 또한 흡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과 유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도로-항만-구역 일체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계획은 서해군사분계선을 넘는 서울-개성-평양 도로 건설과 함께 문산-봉동의 철도연결, 해주항의 개방과 인천-개성-해주-남포를 잇는 서해구역을 개방지구로 선포했던 남북경협사업과 일치한다.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이 유사 패턴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북한의 개혁개방 구상이 2002년 제한적 개방정책을 발표했던

시점과 비교해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대내자립적 노력동원정책은 북한이 1980년대까지 추진했던 경제개발 7개년계획 전망계획과 더불어 완충기 단기정책을 병행 추진했던 패턴과 정향을 보이고 있다. 대풍그룹에 의해 비계획적 독립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10개년 국가경제개발전략은 이전의 전망계획에 속한다. 또한 단기 경공업 우선정책은 전망계획수행 중 속도와 균형조절을 위한 완충기 정책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완충기 정책은 농업·경공업 중심의 노력동원방식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운용 패턴을 통해 본 북한 지도부의 경제개발 구상은 1980년대 중반이후 멈춰 서 버린 경제개발전략의 연장선에 서 있다. 다만 변화한 시대에 걸맞게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의 폭을 확대했고, 최첨단산업발전이라는 질적 구성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핵심 문제는 정책실현의 현실화, 성공 가능성 문제이다. 이는 북한을 둘러싼 주변 상황과 연결하여 전망하여야 한다. 현재 주목할만한 상황은 2012년 미·중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전략적 조정기에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주변상황이 갈등과 분쟁에서 대화와 협력적 조정기에 들어선 2~3년의 시간, 이 시간이 북한에게는 기회이다. 게다가 중국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북한 계획의 현실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망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이 2000년대 초반 시장을 통한 경제 숨트이기를 했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주변국을 움직이며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은 향후 북한경제가 회생을 넘어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지 주목하게 한다. 또한 당분간 북·중경협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가 역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응이 요구된다. **R**